이현숙, "삼락농정, 소득보장 미흡"

도 예산안 심사 정책질의

허남주 "신규 세수확보 노력을" 김대중 "혁신역도 입장 발표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일·순창)는 4일 전북도의 2018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시했

이날 심사는 김송일 도 행정부지사의 제 안 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 의 정책질의가 쏟아졌다.

허남주 위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전북도 내년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이 전년대비 0.37%p 감액된 것과 관련 자체재원 확충 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유치 등을 통 한 신규 세수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최인정 부위원장(군산3)은 지주재원 규 모 감소는 도내 기업의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 동안 전북도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고 질타했다.

김대중 위원(익산1)은 KTX혁신도시역 신설 문제와 관련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 입장을 보도자 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표하여 갈등 을 종식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현숙 위원(민중연합당 비례대표)은 민 선6기 핵심정책으로 추진해온 삼락농정이 그간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농



선창1호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지 난 3일 유조선과 충돌해 침몰한 선창1호의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민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면에서는 미흡 함을 지적하며 전라북도 경제의 중심인 농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강조했다.

최영규 위원(익산4)은 최근 붉어진 KTX 혁신도시역 신설과 관련하여 전주시내 전 철 구축, 익산역과의 연계 등 다른 대안을 요성을 강조했다.

마련하여 혁신도시와의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안 미련의 필 /김진성 기자

허남주, "전북 2017년 지방교부세 감액 41억원"

각종 재정위반 55억 감액 · 인센티브 14억 불과··· 서울 · 세종시 이어 3번째

2017년 전북도가 행 정안전부로부터 부족 한 지방재정을 보충 하도록 국가에서 내 국세의 19.24%를 교 부금으로 지방자치단 체에 주는 지방교부 세 41억 원을 감액하 여 받은 것으로 알려



졌다. 열린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허남주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행 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법 제11조(부당교 부세의 시정 등) 및 시행령 제12조(교부세 의 반환 또는 감액)에 따라 위법한 재정운 영을 하거나 세입징수를 게을리 하는 등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자치단체에 대 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감액된 교부세 에 대해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교부세 감액은 "감시원 감사와 정

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 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감액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북도가 "2017년도 지방교부세 가 각종 재정위반으로 모두 55억원이 감액 되었고, 인센티브는 14억원을 확보, 41억 원의 교부세마저 받지 못했다"며, "이는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 84억4,700만원과 세종특별시 74억2,700만원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라며 적극적인 교부세 감액줄이기 를 주문했다.

허 의원은, "전북도의 내년 일반회계 세 입예산 5조 1,275억중 자체재원은 1조670 억으로 20.81%이며, 의존재원이 73.87%인 3조7,875억원으로 세입재원의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며, 특히 "전년대비 자체재원 비율이 21.18%에서 0.37%p 감소, 재정자립 도는 전년도 18.37%에서 0.3%p 감소한 18.07%로 더욱 낮아진 것으로 자체재원 확충은 더욱 절실한 형편이다"고 강조했 다.

이에 "도청의 전 부서 및 각 시군을 통 하여 교부세 감액에 대한 철저한 교육은 물론, 낙후탈피를 위한 지방교부세 감액 줄이기, 과오납 및 과다결손처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줄이기 등 세입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김광수 의원, 현장중심 민생행보 전주 건강심평원 '1일 지원장' 활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 갑)이 민생현 장에서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며 지역밀 착형, 현장중심형 생활정치의 전면에 나서 며 민생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 지원 '1일 명예지원장' 으로 활동하며 민원

실을 찾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 상담 및 애 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 활동을 펼쳤다.

또한, 지난해 개원한 전주지원의 업무 현 황, 진료비 확인신청 접수 등 심사평가 업 무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원 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1일 명예지원장으로 건강보 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을 찾아주신 지역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호 흡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히며 "국민이 낸 의료비가 제대로 쓰였 는지, 국민이 받은 진료가 적정한지 더욱 세심히 심사·평가해 국민이 신뢰하고, 국 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 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 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서비 스,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지역구민의 소중 한 의견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속해서 지역구민 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정치 • 생활정치 • 민생정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 라고 강조했다.

전북보훈요양원 설립 예산 해결 이상직 민주당 위원장 숨은 노력 결실

전북지역 보훈가족들의 숙원사 업인 전북 국립보훈요양원 설립 을 위한 예산이 드디어 해결됐다. 4일 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상직)는 전북지역 국 립부후유양워 거린 시언비 20억 6,200만원(총사업비 353억원)이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하기로 여 아핫이가 이뤄졌다고 박혔다



이에 따라 전북보훈요양원은 내 년에 첫 삽을 뜨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북보훈요양원 건립문제는 제19대 국회에서부터 당 시 이상직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타당성용역 예산을 반영하는 등 첫 출발을 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외면으 로 지지부진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 첫 국가예산에 반영되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가예산에 전북보훈요양원 건립 시업이 반영되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탄생 주역 으로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직 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장의 숨은 노력이 있었

전국에서 7번째로 건립되는 전북보훈요양원은 2014 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당시 전주 완 산을 국회의원이었던 이상직 현 민주당 전주을지역위 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지역차별을 지적하면서 '전북 보훈병원 및 요양원'건립 필요성을 제기해 처음 시작 됐다. 이후 2015년에는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한 이상직 위원장의 노력으로 타당성용역 예산이 반영됐으며, 지난 6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2018 년 복권기금 운영계획 심의 에서 48억원의 건립사업비 가 심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예산에서 는 '수요부족'을 이유로 다시 누락되면서 '0'예산이 되어 다시 한 번 사업이 표류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 다. 이에 이상직 위원장은 국회 예결위위원장인 민주 당 백재현 의원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의 도움을 받아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북보훈요양원 건립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김진성 기자

김춘진, 고부천유역 홍수방지대책사업 민원 논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춘진 위원장이 고부천유역 홍수 방지대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고부천침수피해 대책위와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2공구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 하 민원을 논의했다.

고부천유역 홍수방지대책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부안군 동진면에서 정읍시 고부면까지 흥덕배수로(하장천) 14.3km 의 하폭을 120m까지 넓히고 배수갑문 1개소를 확장하는 사 업으로 김춘진 위원장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얻어 추진한 사업이다.

이날 고부천침수피해 대책위는 제2공구 지역 ▲교량 추가 4개소 설치 ▲제방 높이를 낮추고 농로 설치 ▲지장물에 의 한 하천 선형 변경안 ▲하천 제방으로 인한 마을이주 등을 김춘진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